

중소도시지역의 저소득 실직가구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천안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1)

허준수*

I. 서론

지난 40년간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국가정책은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을 외면한 경제개발을 정책의 최우선의 목표로 여겨왔다. 정책입안자들은 경제가 우선적으로 발전되어야 국민소득이 오르고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도 발전한다는 잘못된 신화를 맹종하는 경향이 높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중산층과 근로자계층은 경제개발 일변도의 국가경영에서 벗어나 진실로 개개인의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실업, 질환, 빈곤,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의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1995년 ILO의 기준에 의한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재정 규모는 GDP 대비 3.55%(스웨덴: 40.1%(1993), 영국: 21.6%(1993), 일본: 21.4%(1993)), 1995년 OECD 기준에 의한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재정의 추계결과는 GDP 대비 4.93%로 OECD 가입국들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있는 실정으로2), 이 수치들은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재정의 수준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반증해 주고 있다.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본 연구는 1999년 호서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본 연구의 면접조사는 복지세상과 천안자활지원센터와의 협력에 의해서 진행되었음.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2) 공제욱외(2000).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의 추계와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제6집)의 내용을 인용함.

모든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1997년 하반기에는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한파가 우리사회를 급습하였고,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의 통제아래 놓이게 되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그 동안 왜곡되었던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 및 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단행되면서, 대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및 기업부도 등으로 인해서 1998년 1분기에는 백만명을 돌파하였고, 1999년 2월 실업자의 숫자는 178만 5천명을 돌파하였다.³⁾ 1999년 하반기에는 일부분의 경기회복으로 그 숫자가 107만 명으로 감소되었지만, 지난 2년간 IMF경제체제하에서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일용직 및 임시고용직은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전일제의 실질근로자(전년대비 1999년 10월 현재 2백만 명 감소)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상위소득계층과 하위소득 계층과의 소득격차는 더욱 더 확대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또한 실업자의 개념규정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애매 모호하고, 정부의 통계자료에서 제외된 실망실업자 및 청소년실업들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나라의 실업의 문제는 여론지상에서 보도된 것보다는 매우 비관적으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1999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조금은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실업문제는 우리 나라의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실업문제는 선진국의 실업문제들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에 비교해서 실업보험의 제도가 미약한 우리 나라의 노동자들에게의 실업은 개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 및 사회해체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실업의 문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의 가족부양자의 실직은 전체 가족구성원의 실직으로 연결되어서, 대부분의 실직가정은 경제적 곤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심리적인 문제들에도 노출되는 경향이 높다.

현재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업대책들은 실직가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보다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 기존제도(생활보호법, 고용보험, 공공근로 및 취업촉진사업, 직업교육훈련 등)들의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의 정책 및 제도들이 실직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에 국한한 나머지 실업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 심리적인 문제(가족해체, 사회적 고립, 알코올 및 흡연의 증가, 우울증의 증가, 자살충동, 아동

3) 본 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5월의 자료를 참조하였음.

4) 통계청(2000년 3월)의 자료에 의하면 99년 2분기에서 4분기 동안에 하위소득 20%는 근로소득이 월 78만원에서 81만원으로 4%가 상승한 반면, 상위소득 20%는 월 424만원에서 447만원으로 5.4%가 증가하였고, 특히 고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 및 재산소득의 증가는 98년도에 비교해서 6.2%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및 청소년의 문제, 부부갈등 등)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직자들을 위한 고용창출 및 안정이지만, 실직기간동안에 실직가정의 구성원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 심리적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의 실업의 문제는 어느 정도의 비공식 지지체계(가족 및 친척의 도움)를 갖고 있는 중산층 실직가정들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심각하며, 저소득층 가정에서의 가구주의 실직은 곧바로 가족해체 및 노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97년 말 이후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이혼, 별거, 가출 등의 가족해체 현상들이 증가되었으며, 전국의 노숙자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1월 현재 전국의 노숙자는 5,5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⁵⁾, 노숙의 위협에 노출되어있는 월세, 사글세 입주자, 쪽방 및 거리생활자들 포함한다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거시적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현재에도 서울역 및 대도시들의 공공장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숫자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실업에 대해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업 및 이에 따른 빈곤의 근원적인 원인과 저소득계층의 실직자 및 그의 가족들이 겪고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동안 실업문제의 경제적 측면(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보건복지부, 노동연구원 등의 국책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실업의 사회·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조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학술세미나⁶⁾와 한국가족복지학회의 논문들에 실린 실업에 따른 사회·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과 이론적 접근방법 등에 대해서 몇 개의 논문들⁷⁾에서 제기하였을 뿐이지, 이 분야의 심층적인 연구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실업가구에 대한 실태조사⁸⁾는 전국적인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실업실태 및 복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이 연구조사를 통해서 지역적 특성의 편차가 심한 중소지역사회의 저소득 실직가정의 구체적인 생활실태 및 그들의 경제·사회·심리적인 욕구들을

5)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2000년). 노숙자재활프로그램 Workshop자료집 참조.

6) 한국사회복지학회(1998년 11월) 주최로 "실직가족의 위기개입 Workshop"이 개최됨.

7) 이와 관련된 논문들로는 한국가족복지학에 실린 김유순, 이영분(1998) "실직자 심리사회적 대처기능 향상을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 개발" 과 조홍식(1998) "실직자 가족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수립을 위한 가족스트레스 대처 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들이 있음. 위의 논문들은 저소득계층의 실직자 및 그들의 가정들을 초점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실직자 및 가족들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었음.

8)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파악하기에는 미흡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정부는 전국실업률이 다소 떨어지고 경기가 회복국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2000년도의 정부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 및 한시적 생활보호의 예산 등 저소득 서민계층에 투여되는 예산들을 대폭적인 삭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 및 빈곤대책에 투여되는 예산을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다만 지난 그 동안의 실업 및 빈곤대책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⁹⁾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실업 및 빈곤대책에 관련해서 보다 예산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빈곤 저소득 가정에 대한 실업방지 및 빈곤탈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비효과적이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대책 및 프로그램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저소득 근로자 계층의 진정한 자립과 고용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의 내실화와 2000년 10월에 실시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안정적인 시행¹⁰⁾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민간 · 종교 · 시민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확립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II.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를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실업의 문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실직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 사회 및 심리적인 생활실태와 욕구들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위한 연계망의 구축과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의 실업극복대책 및 서비스의 방향설정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전국단위에서 실시되는 실업에 대한 연구조사가 중소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저소득 실직가정의 유형에 따른 생활실태, 욕구조사 및 실업프로그램의 참여도 등을 파악하여, 개별실직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실업대책 및 프로그램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4) 본

9) 경실련노동/실업대책본부(1999)의 [정부의 실업대책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 종합보고서]를 참조.

10) 이 내용은 경실련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에 실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체계의 확립”(허준수, 2000)을 참조하시오.

연구를 통해서 실업문제의 경제적인 측면의 조사들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실업의 사회·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며 1997년 경제위기이후에 실직한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 실직가구의 가구주를 중심으로 하여 표준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적합한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천안시 행정구역에 속해있는 전체 22개 모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 천안자활지원센터의 인적자료 중에서 경제위기이후에 실직한 저소득층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447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999년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 응한 조사대상자중에서 82명의 65세 이상의 가구주들을 제외하고 총 365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체계적인 면접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면접조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체계적인 작성요령 및 효과적인 면접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행한 후에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PC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조사된 자료들의 빈도분석, 평균 등의 서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교차분할분석(Crosstabulation), 일원변량분석(ANOVA) 및 중다귀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이 조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총365명의 응답자들 중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217명(59.5%)이고, 여성은148명(40.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응답자의 연령의 분포는 20세에서 64세이며, 평균연령은 46.3세이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6명(1.6%),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89명(24.4%),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135명(37.0%),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91명(24.9%),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44명(12.1%)이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의 교육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50%이상이 중등교육이하의 교육을 수료하였고,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은 전체응답자들 중에

서 17%에 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의 혼인상태는 다음과 같다: 1) 기혼 163명(44.7%); 2) 사별 85명(23.3%) ; 3)이혼 54명(14.8%); 4) 별거 33명(9.0%); 5) 미혼 30명(8.2%).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월세(26.8%), 전세(22.7%), 기타(20.0%) 및 임대주택(8.2%)등에서 살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81명(22.2%)에 불과 했다.

2. 생활보호의 수혜여부

본 조사의 전체응답자들(n=365명)중에서 57%의 응답자들이 생활보호법의 수혜를 받고있고, 43%의 응답자들이 생활보호의 혜택을 받고있지 않다(표1. 참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37명(10.1%)이 생활보호의 생계보호(이하 A 집단)를, 101명(27.7%)이 생활보호의 자활보호(이하 B 집단)를, 40명(11%)이 한시적 생활보호의 생계보호(이하 C 집단)를, 30명(8.2%)이 한시적 생활보호의 자활보호(이하 D 집단)를 받고있고, 그리고 응답자의 43%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하 E 집단, 혹은 일반 저소득)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생활보호제도의 수혜의 여부

구 분	n	%
생활보호-생계보호(A)	37	10.1
생활보호-자활보호(B)	101	27.7
한시적생활보호-생계보호(C)	40	11.0
한시적생활보호-자활보호(D)	30	8.2
해당무(일반저소득)(E)	157	43.0
전 체	365	100.0

3. 경제적 특성

1) 실직의 원인

전체응답자들의 실직의 원인들로는 개인적인 사정(39.2%),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26.8%), 기타(18.2%), 사업장폐업(10.0%), 정리해고(5.0%), 자의에 의한 퇴사(0.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조사대상자의 실직의 원인

구 분	n	%
정리해고	14	5.0
사업장 폐업	28	10.0
자의에 의한 퇴사	2	0.7
경기침체에 의한 일자리 감소	75	26.8
개인적사정	110	39.3
기 타	51	18.2
계	280	100.0

2) 실직전 취업유형

조사응답자들의 실직전 취업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동(53.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생산 기능직(13.1%), 자영업(7.1%)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직, 영업직, 관리직 및 사무직에 종사한 응답자는 적은 편이다(<표 3> 참조). 이 결과에 의하면 경제위기의 상황 속에서 단순노동이나 일용직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표 3> 조사응답자의 실직전의 취업유형

취업유형	n	%
단순노동	152	53.9
자영업	20	7.1
생산기능직	37	13.1
영업직	6	2.1
사무직	3	1.1
관리직	5	1.8
전문직	17	6.0
기타	42	14.9
계	282	100.0

3) 소득

실직전과 실직후의 응답자들의 월소득을 비교해본 결과, 실직후 응답자들의 소득이 급격히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예를 들어서 실직전에는 응답자들 중에서 월소득이 75만원 이상인 자가 40%이상이지만, 실직후에 응답자들 중에서 월소득이 70만원이상의 자가 단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전혀 없거나 월소득 25만원 미만의 자들도 전체응답자들의 65.8%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업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4> 실직전 월소득과 실직후 월소득

소득 구분	실직전 소득		실직후 소득	
	n	%	n	%
0~25만원 미만	103	28.2	240	65.8
25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4	14.8	89	24.4
50만원 이상-75만원 미만	62	17.0	24	6.6
75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61	16.7	7	1.9
100만원 이상-125만원 미만	36	9.9	4	1.1
125만원 이상	49	13.4	1	0.3
계	365	100.0	365	100.0

4) 생활비의 주요출처

응답자들의 현재 생활비의 주요출처를 조사해 본 결과 시간제/임시직 고용, 공공근로 및 주변 사람들의 도움 등으로 나타났지만, 5개의 집단간에 약간의 상이성도 나타났다(<표 5> 참조). A집단은 시간제, 주변사람들의 도움, 생활보호급여, 기타, 공공근로/취로사업의 순으로, B집단은 시간제, 공공근로, 기타, 저축, 주변사람들의 도움, 생활보호급여의 순으로, C집단은 시간제, 기타, 생활보호급여 및 주변사람들의 도움, 은행융자의 순으로, D집단은 기타, 시간제, 공공근로, 주변사람들의 도움의 순으로, E 집단은 시간제, 공공근로, 기타, 주변사람들의 도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응답자의 주요 생활비의 출처

구 분	생활보호-생계	생활보호-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일반저소득
	A(n=37)	B(n=101)	C(n=40)	D(n=30)	E(n=157)
	n(%)	n(%)	n(%)	n(%)	n(%)
저축	1 (2.7)	6 (5.9)	0 (0.0)	1 (3.3)	8 (5.1)
퇴직금	0 (0.0)	1 (1.0)	0 (0.0)	0 (0.0)	2 (1.3)
은행융자	0 (0.0)	2 (2.0)	1 (2.5)	0 (0.0)	3 (1.9)
사채	0 (0.0)	1 (1.0)	0 (0.0)	1 (3.3)	2 (1.3)
시간제/임시직 고용	11(29.7)	33(32.7)	21(52.5)	7(23.3)	64(40.8)
공공근로/취로사업	3 (8.1)	27(26.7)	0 (0.0)	6(20.0)	19(12.1)
생활보호급여	7(18.9)	4 (4.0)	4(10.0)	0 (0.0)	0 (0.0)
주변사람들의 도움	10(27.0)	5 (5.0)	4(10.0)	2 (6.7)	21(13.4)
기타	5(13.5)	22(21.8)	10(25.0)	13(43.3)	38(24.1)

4. 실업관련의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이용의 정도

1) 실업관련 프로그램들의 참여도.

실업관련프로그램들의 이용도를 조사해본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업관련의 프로그램들로는 공공근로사업(35.3%), 구직등록(27.67%), 직업교육프로그램(7.7%), 고용보험(4.7%), 생업자금융자(3.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조사대상자의 유형에 따른 실업관련프로그램의 참여여부

구 분	생활보호-생계		생활보호-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일반저소득	
	A(n=37)		B(n=101)		C(n=40)		D(n=30)		E(n=157)	
	n(%)		n(%)		n(%)		n(%)		n(%)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고용보험	3(8.1)	34(91.9)	4(4.0)	97(96.0)	2(5.0)	38(95.0)	2(6.6)	28(93.4)	8(5.1)	149(94.9)
공공근로	12(32.4)	25(67.6)	42(41.6)	59(58.4)	10(25.0)	30(65.0)	13(43.3)	17(56.7)	52(33.1)	105(66.9)
직업교육프로그램	5(13.5)	32(86.5)	7(6.9)	94(93.1)	2(5.0)	38(95.0)	1(3.3)	29(96.7)	13(8.3)	144(91.7)
생업자금융자	1(2.7)	36(97.3)	5(5.0)	96(95.0)	2(5.0)	38(95.0)	1(3.3)	29(96.7)	5(3.2)	152(96.8)
구직등록	2(5.4)	35(94.6)	32(31.7)	69(68.3)	6(15.0)	34(85.0)	10(33.3)	20(66.7)	51(32.5)	106(67.5)

2) 취업정보의 제공처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정보의 제공처를 살펴보면 언론매체(27.9%), 주변사람들(20.8%), 읍면동사무소(10.7%), 노동사무소(7.1%), 사회복지관(2.2%), 민간사회단체(0.8%), 시청(0.3%) 과 종교기관(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유형에 따른 취업정보의 제공처를 살펴보면, A집단은 언론매체, 읍면동사무소, 주변사람들, 노동사무소 등의 순서로, B 집단은 주변사람들, 언론매체, 읍면동사무소, 노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의 순서로, C 집단은 읍면동사무소, 언론매체, 주변사람들과 민간사회단체, 노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 순서로, D 집단은 주변사람들, 읍면동사무소, 노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 등의 순서로, E 집단은 언론매체, 주변사람들, 노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민간사회단체/시청/종교기관(각각 0.6%)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chi^2 = 77.1368, p < 0.001$)(<표 7> 참조).

<표 7> 조사응답자의 유형에 따른 취업정보의 제공처

구 분	생활보호-생계	생활보호-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일반저소득
	A(n=31) n(%)	B (n=78) n(%)	C(n=35) n(%)	D(n=28) n(%)	E(n=149) n(%)
노동사무소	1 (2.7)	7 (6.9)	1 (2.5)	2 (6.7)	15 (9.6)
시청	0 (0.0)	0 (0.0)	0 (0.0)	0 (0.0)	1 (0.6)
읍면동	5(13.5)	11(10.9)	7(17.5)	4(13.3)	12 (7.6)
사회복지관	0 (0.0)	3 (3.0)	1 (2.5)	2 (6.7)	2 (1.3)
민간사회단체	0 (0.0)	0 (0.0)	2 (5.0)	0 (0.0)	1 (0.6)
종교단체	0 (0.0)	0 (0.0)	0 (0.0)	0 (0.0)	1 (0.6)
언론매체	15(40.5)	22(21.8)	6(15.0)	0 (0.0)	50(31.8)
주변사람들	3 (8.1)	28(27.7)	2 (5.0)	5(16.7)	38(24.2)
기타	7(18.9)	7 (6.9)	16(40.0)	6(20.0)	29(18.5)

3)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책

응답자들은 재취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구인/구직정보(46.3%), 직업교육(12.4%), 사업자금융자(9.3%), 창업교육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직업교육이나 사업자금융자보다는 고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조사응답자의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책

구 분	n	%
직업교육	32	12.4
창업교육	4	1.5
구인/구직정보	120	46.3
사업자금융자	24	9.3
기타	79	30.5
계	259	100.0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재취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책을 살펴보면, A집단은 직업교육, 구인/구직정보, 사업자금융자의 순서로 나타났고, B 집단은 구인/구직정보, 사업자금융자, 직업교육의 순서로, C 집단은 구인/구직정보, 사업자금융자, 직업교육의 순서로, D 집단은 구인/구직정보, 직업교육 및 사업자금융자의 순서로, E 집단들은 구인/구직정보, 직업교육 및 사업자금융자, 창업교육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조사응답자의 유형에 따른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책

구 분	생활보호-생계	생활보호-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일반저소득	χ^2	Sig.
	A(n=35) n(%)	B(n=50) n(%)	C(n=28) n(%)	D(n=25) n(%)	E(n=121) n(%)		
직업교육	15(42.9)	2 (4.0)	2 (7.1)	2 (8.0)	11 (9.1)	62.577	0.000***
창업교육	0 (0.0)	0 (0.0)	0 (0.0)	0 (0.0)	4 (3.3)		
구인/구직정보	6(17.1)	30(60.0)	5(17.9)	14(56.0)	65(53.7)		
사업자금융자	3 (8.6)	5(10.0)	3(10.7)	2 (8.0)	11 (9.1)		
기 타	11(31.4)	13(26.0)	18(64.3)	7(28.0)	30(24.8)		

*** p<.001

5. 건강실태 및 심리·사회적 문제

응답자들의 유형에 따른 음주소비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D 집단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실직이 후에 음주소비량과 흡연률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흡연률 역시 D 집단을

제외하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후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집단에서 실직이후에 건강상태($\chi^2= 30.914, P<0.05$)가 매우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10> 참조). 특히 C, D, E 집단의 경우에는 실직이후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거의 60%

<표 10> 조사응답자의 유형에 따른 기호식품의 소비량, 실직전 건강상태 및 현재의 건강상태

구 분	생활보호-생계 A(n=37)	생활보호-자활 B(n=101)	한시-생계 C(n=40)	한시-자활 D(n=30)	일반저소득 E(n=157)
	n(%)	n(%)	n(%)	n(%)	n(%)
음주 섭취량					
매우감소	0 (0.0)	1 (1.9)	2(13.3)	0 (0.0)	5 (5.8)
감소	3(21.4)	4 (7.6)	0 (0.0)	2(22.2)	13(15.1)
보통	5(35.7)	28(52.8)	9(60.0)	6(66.7)	41(47.7)
증가	2(14.3)	16(30.2)	3(20.0)	0 (0.0)	20(23.3)
매우 증가	4(28.6)	4 (7.5)	1 (6.7)	1(11.1)	7 (8.1)
담배 소비량					
매우감소	1 (5.6)	1(2.1)	1 (4.8)	0 (0.0)	4 (4.5)
감소	1 (5.6)	0 (0.0)	0 (0.0)	3(23.1)	13(14.6)
보통	8(44.4)	26(55.3)	14(66.7)	8(61.5)	46(51.7)
증가	4(22.2)	14(29.8)	4(19.0)	0 (0.0)	18(20.2)
매우 증가	4(22.2)	6(12.8)	2 (9.5)	2(15.4)	8 (9.0)
실직후 건강상태 변화					
매우 나빠졌다	13(35.1)	12(11.9)	9(22.5)	8(26.7)	18(11.5)
나빠졌다	10(27.0)	36(35.6)	16(40.0)	12(40.0)	67(42.7)
변함없다	13(35.1)	49(48.5)	14(35.0)	10(33.3)	69(43.9)
좋아졌다	0 (0.0)	4 (4.0)	1 (2.5)	0 (0.0)	3 (1.9)
매우 좋아졌다	1 (2.7)	0 (0.0)	0 (0.0)	0 (0.0)	0 (0.0)
현재의 육체적 건강					
매우 나쁘다	15(40.5)	16(15.8)	9(22.5)	7(23.3)	23(14.6)
나쁘다	8(21.6)	49(48.5)	18(45.0)	12(40.0)	54(34.4)
보통이다	12(32.4)	32(31.7)	13(32.5)	10(33.3)	67(42.7)
좋다	2 (5.4)	4 (4.0)	0 (0.0)	1 (3.3)	12 (7.6)
매우 좋다	0 (0.0)	0 (0.0)	0 (0.0)	0 (0.0)	1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집단의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이 현재의 건강상태($\chi^2= 26.451$, $P<0.05$)가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응답자들의 현재의 정신건강상태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표 11> 참조). 조사

<표 11> 응답자의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스트레스, 우울감 및 자살충동의 정도.

구 분	생활보호-생계	생활보호-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일반저소득	χ^2	Sig.
	A(n=37) n(%)	B(n=101) n(%)	C(n=40) n(%)	D(n=30) n(%)	E(n=157) n(%)		
현재의 정신건강							
매우 나쁘다	13(35.1)	12(11.9)	11(27.5)	2 (6.7)	25(15.9)	24.280	0.084
나쁘다	10(27.0)	50(49.5)	19(47.5)	20(66.7)	69(43.9)		
보통이다	12(32.4)	32(31.7)	8(20.0)	6(20.0)	54(34.4)		
좋다	2 (5.4)	6 (5.9)	2 (5.0)	2 (6.7)	7 (4.5)		
매우 좋다	0 (0.0)	1 (1.0)	0 (0.0)	0 (0.0)	2 (1.3)		
현재의 스트레스						43.956	0.000***
매우 낮다	1 (2.7)	1 (1.0)	1 (2.5)	1 (3.3)	3 (1.9)		
낮다	0 (0.0)	3 (3.0)	0 (0.0)	1 (3.3)	4 (2.5)		
보통	10(27.0)	20(19.8)	14(35.0)	12(40.0)	55(35.0)		
높다	5(13.5)	50(49.5)	5(12.5)	4(13.3)	38(24.2)		
매우 높다	21(56.8)	27(26.7)	20(50.0)	12(40.0)	57(36.3)		
우울감의 정도						13.068	0.364
전혀 느끼지 않는다	2 (5.4)	5 (5.0)	1 (2.5)	3 (10.0)	8 (5.1)		
그저 그렇다	11(29.7)	31(30.7)	8(20.0)	7 (23.3)	54(34.4)		
자주 느낀다	16(43.2)	50(49.5)	20(50.0)	11 (36.7)	55(35.0)		
항상 느낀다	8(21.6)	15(14.9)	11(27.5)	9 (30.0)	40(25.5)		
자살충동						32.198	0.009**
거의 느끼지 못했다	11(29.7)	29(28.7)	3 (7.5)	8(26.7)	59(37.6)		
가끔 느꼈다	16(43.2)	44(43.6)	21(52.5)	11(36.7)	66(42.0)		
자주 느꼈다	3 (8.1)	22(21.8)	10(25.0)	7(23.3)	17(10.8)		
늘 느꼈다	7(18.9)	6 (5.9)	6(15.0)	4(13.3)	15 (9.6)		

** p<0.01 *** p< 0.001

대상자들의 거의 80%가 현재의 정신건강의 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상태를 살펴보면 A, B, C, D, E집단 모두에서 현재의 정신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실직과 빈곤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chi^2= 24.280$, sig.= 0.084). 현재의 스트레스의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A집단, C집단, D 집단, E 집단, B 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집단들(A, B, C, D 집단)이 E 집단보다도 현재의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i^2= 43.956$, $P<0.001$).

집단간의 우울감의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chi^2= 13.068$, sig.= 0.364), 전반적으로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발견된 매우 심각한 사실은 3분의 1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가끔 느꼈다는 것이다. 집단간의 자살에 대한 충동을 살펴보면 A 집단, C 집단, D 집단, E 집단 B 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chi^2= 32.198$, $p<0.01$). B 집단을 제외하고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응답자들이 일반저소득 응답자(E 집단)들 보다 자살에 대한 충동을 더욱 더 자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6. 복지프로그램, 경제적후원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욕구

1) 가장 필요한 복지프로그램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움을 살펴보면 경제적 후원(77.3%), 구직상담/알선(13.2%), 취업교육(2.7%), 주거문제(2.2%) 및 기타(2.2%), 가족상담(1.1%), 정서적 상담(0.5%) 및 음주/흡연/약물문제(0.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지와 구직 및 구인에 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교육에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의 유형에 따른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A집단은 경제적인 후원을 가장 선호했고, 구직상담, 주거문제, 약물문제 등은 동일한 수준의 욕구를 보이고 있다. B 집단 역시 경제적인 후원을 최우선적으로 원했고, 구직상담, 취업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적 상담, 주거 및 약물문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C 집단은 경제적 후원, 주거문제, 취업교육 및 구직 상담 등의 순서로, D 집단은 경제적 후원, 구직상담, 취업교육, 가족상담의 순서로, E 집단은 경제적 후원, 구직상담, 주거문제, 취업교육, 가족상담의 순서로 나타났다($\chi^2= 46.778$, $p<0.05$)(<표 12> 참조).

<표 12> 조사응답자들의 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및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구 분	생활보호-생계	생활보호-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일반저소득	χ^2	Sig.
	A(n=37)	B(n=101)	C(n=40)	D(n=30)	E(n=157)		
	n(%)	n(%)	n(%)	n(%)	n(%)		
경제적후원	34(91.9)	84(83.2)	35(87.5)	19(63.3)	111(70.7)	46.778	0.044*
취업교육	0(0.0)	3(3.0)	1(2.5)	2(6.7)	4(2.5)		
구직상담.알선	1(2.7)	7(6.9)	1(2.5)	7(23.3)	32(20.4)		
가족상담	0(0.0)	2(2.0)	0(0.0)	1(3.3)	1(0.6)		
주거문제	1(2.7)	1(1.0)	2(5.0)	0(0.0)	5(3.2)		
음주/흡연/약물	1(2.7)	1(1.0)	0(0.0)	0(0.0)	0(0.0)		
정서적상담	0(0.0)	2(2.0)	0(0.0)	0(0.0)	0(0.0)		
여가/취미활동	0(0.0)	0(0.0)	0(0.0)	0(0.0)	0(0.0)		
기타	1(2.7)	1(1.0)	1(2.5)	1(3.3)	4(2.5)		

*p<0.05

2) 부족한 생활비목

조사응답자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생활비목을 살펴보면 식품비(39.5%), 교육비(19.5%), 주거비(15.3%), 의료비(9.9%), 세금 및 공과금(8.8%), 기타(4.9%), 연료비(1.4%), 피복비(0.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유형에 따른 가장 부족한 생활비용을 살펴보면, A집단은 식품비,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B 집단은 식품비, 주거비, 세금 및 공과금, 의료비, 피복비, 연료비 등의 순서로, C 집단은 식품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순서로, D 집단은 식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와 연료비, 세금/공과금과 교통비 등의 순서로, E 집단은 식품비, 교육비, 주거비, 세금/공과금, 의료비, 교통비와 연료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chi^2= 64.382$, $p<0.01$)(<표 13> 참조).

<표 13> 조사대상자들의 유형에 따른 가장 부족한 생활비목

구 분	생활보호-생계	생활보호-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일반저소득	χ ²	Sig.
	A(n=37)	B(n=101)	C(n=40)	D(n=30)	E(n=157)		
	n(%)	n(%)	n(%)	n(%)	n(%)		
식품비	19(51.4)	43(42.6)	2(5.0)	7(23.3)	53(33.8)	64.382	0.003**
교육비	5(13.5)	14(13.9)	9(22.5)	6(20.0)	37(23.6)		
의료비	5(13.5)	9(8.9)	4(10.0)	3(10.0)	15(9.6)		
피복비	0(0.0)	1(1.0)	0(0.0)	0(0.0)	0(0.0)		
세금/공과금	0(0.0)	10(9.9)	0(0.0)	1(3.3)	21(13.4)		
주거비	4(10.8)	17(16.8)	5(12.5)	7(23.3)	23(14.6)		
교통비	0(0.0)	0(0.0)	0(0.0)	1(3.3)	1(0.6)		
연료비	1(2.7)	0(0.9)	0(0.0)	3(10.0)	1(0.6)		
기타	3(8.1)	7(6.9)	0(0.0)	2(6.7)	6(3.8)		

**p<0.01

3) 최소한의 생활비

응답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월)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25만원이상 50만원 미만을 선호하는 조사대상자가 146명(40.0%),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이 113명(31.0%),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42명(11.5%), 25만원 미만이 34명(9.3%),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 30명(8.3%)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월 25만원 이상 75만원 이하의 생활비가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살펴보면, A집단은 50만원 이상 75만원미만이 가장 많았고, B, C, D, E집단들은 25만원이상 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A, D, E 집단의 경우에는 75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응답도 B와 C 집단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표 14> 참조).

전체 응답자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고 싶은 생활비(월)의 정도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25만원 이상이 155명(42.5%),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54명(14.8%), 2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이 53명(14.5%),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이 52명(14.2%),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30명(8.2%), 그리고 불과 21명(5.8%)만이 5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응답자의 유형에 따른 최소생활비, 희망급여형태,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고싶은 희망급여의 형태 및 보조금액수

구 분	생활보호-생계	생활보호-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일반저소득
	A(n=37) n(%)	B(n=101) n(%)	C(n=40) n(%)	D(n=30) n(%)	E(n=157) n(%)
최소한의 한달 생활비					
0-25만원 미만	1 (2.7)	10 (9.9)	9(22.5)	5(16.7)	9 (5.7)
25만원이상-50만원미만	12(32.4)	48(47.5)	16(40.0)	11(36.7)	59(37.6)
50만원이상-75만원미만	16(43.2)	29(28.7)	10(25.0)	8(26.7)	50(31.8)
75만원이상-100만원미만	5 (13.5)	8 (7.9)	2(5.0)	4(13.3)	23(14.6)
100만원이상	3 (8.1)	6 (5.9)	3(7.5)	2 6.7)	16(10.2)
후원받고 싶은 급여형태					
현금	35(94.6)	94(93.1)	39(97.5)	29(96.7)	133(84.7)
현물	1 (2.7)	0 (0.0)	0(0.0)	0 (0.0)	1(0.6)
상품권 및 교환권	0 (0.0)	2 (2.0)	0(0.0)	1 (3.3)	1(0.6)
상관없음	1 (2.7)	5 (5.0)	1(2.5)	0 0.0)	21(14.0)
희망 현금 보조금의 정도					
0-5만원미만	0 (0.0)	7 (6.9)	1 (2.5)	0 (0.0)	13(8.3)
5만원이상-10만원미만	2 (5.4)	13(12.9)	5(12.5)	1 (3.3)	9(5.7)
10만원이상-15만원미만	10(27.0)	12(11.9)	5(12.5)	1 (3.3)	24(15.3)
15만원이상-20만원미만	11(29.7)	11(10.9)	1 (2.5)	2 (6.7)	29(18.5)
20만원이상-25만원미만	6(16.2)	13(12.9)	6(15.0)	8(26.7)	20(12.7)
25만원이상	8(21.6)	45(44.6)	22(55.0)	18(60.0)	62(39.5)

4)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전체 응답자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나 서비스들은 교육비보조, 사교육비보조, 생활 및 진로상담, 탁아보호, 방과후교육, 학습지도 및 취미/여가활동의 순서로 나타났다. 저소득 실직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의 교육비문제(30.7%)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의 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A집단은 교육비보조와 사교육비보조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응답했고, B 집단은 사교육비보조를 교육비보조보다도 우선시 하였고, C 집단은 교육비보조 다음으로 생활 및 진로진도를 원했으며, D 집단은 교육비보조와 사교육비 보조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E 집단은 교육비보조, 사교육비보조, 생활 및 진로지도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표 15> 참조).

<표 15> 응답자들의 유형에 따른 자녀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도움의 종류

구 분	생활보호-생계	생활보호-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일반저소득
	A(n=37) n(%)	B(n=101) n(%)	C(n=40) n(%)	D(n=30) n(%)	E(n=157) n(%)
교육비보조	8(21.6)	23(22.8)	18(45.0)	8 (26.7)	55(35.0)
사교육비보조	8(21.6)	29(28.7)	3 (7.5)	8 (26.7)	24(15.3)
탁아보호	1 (2.7)	4 (4.0)	1 (2.5)	0 (0.0)	6 (3.8)
방과후교육	0 (0.0)	3 (3.0)	0 (0.0)	0 (0.0)	3 (1.9)
학습지도	0 (0.0)	0 (0.0)	0 (0.0)	1 (3.3)	3 (1.9)
생활 및 진로상담	7(18.9)	8 (7.9)	9(22.5)	5 (16.7)	23(14.6)
취미 및 여가활동	0 (0.0)	1 (1.0)	0 (0.0)	0 (0.0)	3 (1.9)
기타	5(13.5)	13(12.9)	3 (7.5)	4 (13.3)	13 (8.3)
해당무	8 (21.6)	20(19.8)	6(15.0)	4 (13.3)	28(17.2)

IV. 결론 및 함의

1) 연구결과: 전체응답자들의 실직의 원인들로는 개인적인 사정,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사업장폐업(10.0%), 정리해고(5.0%), 자의에 의한 퇴사(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천안지역의 저소득계층의 실직원인이 대도시의 실직원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직의 원인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보다도 많이 나타난 것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교육 및 기술 등의 부족 등으로 정규적인 직업이나 직장에

종사하기보다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임시직에 간헐적인 경우가 많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놓인 실망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이고, 또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노동불능자의 상태로 머무는 경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일반집단의 경우에도 실직의 원인으로 개인적인 사정, 경기침체, 사업장폐업, 정리해고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사업장폐쇄나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감소가 두 번째의 실직원인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계층들은 전국실업률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전혀 고용보험에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일감의 부족은 곧바로 가정의 빈곤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극한상황에 이르게 된다. 지역의 특성(산업별 집중도, 노동력의 분포)에 따라서 실업의 발생원인들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업별 실업률을 상시적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실업대책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업대책 및 프로그램들을 융통성 있게 지역의 토양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묘미를 살려야 한다.

2) 연구결과: 응답자들의 실직전 취업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생산 기능직, 자영업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직, 영업직, 관리직 및 사무직에 종사한 응답자는 적은 편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실직전의 취업유형이 일정규모이상의 회사의 정규직에서 종사하다가 실직을 했기보다도, 비정규적인 단순노동이나 일용직에 종사하다가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매우 높으므로, 생산기능직, 영업직, 관리직 등의 월급생활자 중심의 기존의 실업대책 및 직업교육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의 실업문제의 해결 및 고용창출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저소득 실직가구들 중에서도 실직전 취업유형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실업대책의 마련에 있어서 집단유형에 부합하는 대책들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3) 연구결과: 실직전과 실직후의 조사응답자들의 월소득을 비교해 본 결과, 실직후 월소득이 전혀 없거나 월소득 25만원 미만의 자들도 전체응답자들의 65.8%를 차지하고 있고, 실직후에 월소득이 70만원이상의 자가 단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유형에 따라서 실직후 월별 개별소득을 비교해본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의 소득이 25만원이하로 나타났다(A집단: 70%; B 집단: 65%; C 집단: 80%; D 집단: 73%; E 집단 : 60%). 이 결과는 선진국에 비해서 고용보험의 급여수준이 낮고, 수혜기간도 매우 짧으며, 공적부조제도에 의한 급여 역시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한 가장의 실직이 곧바로 가정 전체의 실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일반 저소

득집단의 경우에도 현재 월 소득 25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무려 60%에 이르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들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고용보험의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저소득 실직가정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경제적 후원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4) 연구결과: 조사응답자들의 생활비의 주요출처를 조사해본 결과 시간제/임시직 고용, 공공근로 및 주변사람들의 도움 등으로 나타났지만, 집단유형별로 약간의 상이성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주요 생활비의 출처를 살펴보면 생활보호의 수혜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제 및 임시고용에 따른 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저소득 실직근로자들이 정부의 비현실적인 실업대책이나 프로그램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기회가 주어지면 개인의 노동을 통해서 현재의 빈곤상황을 극복하려는 근로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나 중산층이 우려하는 실업예산의 확대에 의한 저소득실직가구의 공적부조의 의존성의 증가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대부분의 저소득 실직근로자들에게 가족 및 주변의 경제적인 지원이 주요한 소득원의 하나로 조사된 것을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실업문제로 인한 문제해결을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비공식지지망(Informal Support Network)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생활보호급여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조사응답자들은 생활보호급여가 그들의 생활비의 주요원천이 아니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비현실적인 생활보호급여의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5) 연구결과: 실업관련프로그램들의 이용도를 조사해본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업관련의 프로그램들로는 공공근로사업(35.3%), 구직등록(27.67%), 직업교육프로그램(7.7%), 고용보험(4.7%), 생업자금융자(3.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실시하는 실업관련프로그램들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사회일각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운영과 비생산적인 활동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들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의지의 고취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하여 저소득실직가정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직등록과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들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 중의 하나임에 불구하고 매우 형식적이며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소득 실직자들의 경우 교육과 직업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구직등록과 직업교육을 받았더라도 그들의 구직과

고용확대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정부의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생업자금융자의 경우에는 수급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금액이 적고, 보증인제도 때문에 대부분의 저소득실직가정의 실업 문제 및 실업극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경기가 회복된다하더라도 고실업·저성장의 형태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아래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실시해왔던 실업대책들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여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를 막고 저소득실직가정들의 진정한 고용창출에 의한 빈곤탈출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6) 연구결과 :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정보의 제공처를 살펴보면 언론매체(27.9%), 주변사람들(20.8%), 읍면동사무소(10.7%), 노동사무소(7.1%), 사회복지관(2.2%), 민간사회단체(0.8%), 시청(0.3%) 과 종교기관(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언론매체나 주변사람들의 정보들에 의해서 취업정보를 얻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읍면동사무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노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취업정보를 얻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의 민간사회단체와 종교기관 등의 역할은 미비하였고, 특히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1명만이 시청에서 취업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저소득계층들은 고용 및 취업에 관한 정보들을 정부나 공적기관(지방의 노동사무소)등에서 얻기보다는 일반 언론매체나 비공식지지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다. 저소득 실직가정들의 실업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사회복지관 및 민간단체들의 고용관련업무를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7) 연구결과: 조사응답자들은 재취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구인/구직정보(46.3%), 직업교육(12.4%), 사업자금융자(9.3%), 창업교육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직업교육이나 창업을 위한 사업자금융자보다는 고용에 관한 구직정보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에게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직업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구인 및 구직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더욱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내고있다. 또한 수요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의 개별유형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지원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관련 대책 및 서비스들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 실직가정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구인 및 구직에 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실업관련의 공적기관(시청, 읍면동, 노동사무소)과 사적기관(복지관,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을 연계하여 체계화하는 방법 및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8)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실직이후에 음주소비량과 흡연률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직이후에 조사대상자들의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매우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실직이라는 사건이 한 개인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입증시켜 주고 있고, 실직가정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외에도 의료보호제도의 현실화 및 의료서비스의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우면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저소득 실직가정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간접적인 차원에서 비영리단체들의 의료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직기간동안에 육체적인 건강이 나빠지면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설사 고용의 기회가 제공되더라도 그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9) 연구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현재의 정신건강상태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응답자의 거의 80%가 현재의 정신건강의 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하고 있고,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우울감을 자주 느끼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사실은 전체 응답자들 중의 3분의 1이상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자주 느꼈다는 사실이다.

이 조사의 결과는 실직과 빈곤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 동안의 실업대책이 경제적인 후원으로 국한되었는데 실업으로 발생하는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내의 민간단체(사회복지관,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저소득 실직가정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대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실업의 심리사회적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비할 경우 실업으로 인한 가족해체(이혼, 별거) 및 부적응(아동학대, 가정폭력, 자살)의 현상들은 더욱 더 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연구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움을 살펴보면 경제적 후원(77.3%), 구직상담/알선(13.2%), 취업교육(2.7%), 주거문제(2.2%) 및 기타(2.2%), 가족상담(1.1%), 정서적 상담(0.5%), 음주/흡연/약물문제(0.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급여와 구직 및 구인에 관한 정기적인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응답자들의 유형에 따라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자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 대

책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모든 실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실직가정의 특성, 욕구 및 유형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프로그램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1) 연구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생활비목을 살펴보면 식품비,(39.5%), 교육비 (19.5%), 주거비(15.3%), 의료비(9.9%), 세금 및 공과금(8.8%), 기타(4.9%), 연료비(1.4%), 피복비 (0.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세 가지의 생활비목은 식품, 교육 및 주거비용에 관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저소득층의 식품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권(Food Stamp)의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식품권제도를 모색해 나가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저소득 실직가정들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음식배급사업(Food Bank)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적부조의 교육보호의 급여를 현실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공적부조제도의 교육보호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저소득 실직가정들에 대한 교육비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2000년 10월에 실시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소득 계층의 세금 및 공과금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형평성에 맞는 세금과 공과금의 감면 및 감액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연구결과: 전체 응답자들이 생활의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월 25만원이상 50만원 미만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146명(40.0%), 월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이 113명(31.0%), 월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42명(11.5%), 월 25만원 미만이 34 명(9.3%), 그리고 월 100만원 이상이 30명(8.3%)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25만원 이상 75만원 이하의 생활비가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계비지원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마련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하고,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의 공적부조의 대상에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저소득 실직가정들을 위해서 지역 내에 실직가정을 돕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개별 단체별의 산발적이며 비정기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서로 연합하여 실직가정들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 및 기타의 다양 후원들(사회심리적지지, 상담 및 교육 등)을 해 줄 수 있도록 체제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현물, 상품권/교환권보다는 현금의 형태로 도움을 받기를 매우 선호하

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지 않는 현물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기보다는 개별가구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

13) 연구결과: 응답자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나 서비스들은 교육비보조, 사교육비보조, 생활/진로상담, 탁아보호, 방과후교육, 학습지도 및 취미/여가활동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저소득 실직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의 공교육과 사교육을 위한 교육비문제 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탁아보호, 방과후 교육, 학습지도 및 취미/여가활동 등에 대한 욕구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설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교육보호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교육비용을 완전히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하루빨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관과 비영리단체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저소득계층의 교육보호에 활용하고 있는 Head Start Program을 모델로 하여 저소득계층들의 자녀들에 대한 탁아보호, 학습지도, 여가활동, 및 정서상담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 이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소득 실직가정의 아동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재정의 결핍이나 인력 및 기술의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재정적, 전문인력 및 기술적 요소 등에 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